

국립대 교수가 '논문 장사'

제자 논문 대필·심사 통과 대가 수천만원 챙겨

전남대 교수 구속

특수대학원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논문 장사'를 해 온 현직 국립대 교수가 검찰에 구속됐다. 주로 직장에 다니는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한 논문 대필과 논문 통과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간다는 대학가 주변의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성운)는 29일 제자들의 논문 작성과 심사 통과를 돕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 정남대 김모(49) 교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 2006년 가을과 올해 가을에 졸업한 특수대학원 석사 과정 대학원생 김모

씨 등 16명의 논문 작성과 심사과정을 돕고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 교수는 이들의 청탁을 받고 일반 대학원에 재학중인 제자들에게 특수대학원 졸업 예정자들의 논문 일정 부분을 대신 써주도록 한 뒤 논문 심사에 참여해 이들의 논문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김 교수는 이러한 대가로 2006년도에는 제자 1인당 각각 300만 원씩을, 2008년도에는 각각 200만 원씩의 일괄적인 청탁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게 돈을 준 대학원생 16명 중 5명이 공무원이었으며, 11명은 기업체 운영자 또는 임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승진이나 임용 등에 석사학위를 활용하기 위해 김 교수에게 돈을 주고 까다로운 논문 심사를 통과, 졸업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은 논문을 대가로 돈을 전달한 대학원생들은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김 교수는 또 2003년 12월에도 이 같은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징역 1년)와 추징금 2천400만 원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 때문에 2004~2005년 지도교수의 지위를 박탈당했다가 2006년 복귀하자마자 또 다시 '논문 장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촛불에 소원 담아

29일 밤 광주시 북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제10회 촛불의 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희망의 촛불을 들고 새해 소원을 간절히 빌고 있다. 광주시 북구청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소원된 이웃을 위한 북구민들의 송년 문화행사로, 벨리 댄스와 합창단 공연, 직장인 밴드 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가짜 패널' 왜 판치나 했더니...

제조자 처벌·참고 설치 규정 없어 화재 때 대형 참사 우려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의 주범이 되고 있는 가짜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제조·설치 등에 대한 법 규정이 아직도 미비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짜 샌드위치 패널 제조·시공업자 적발=광주경찰청은 29일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단 입주 공장에 난연(難燃·불에 잘 타지 않음) 기능이 전혀 없는 가짜 '샌드위치 패널'을 납품한 패널 제조업체 D사 대표 오모(40)씨와 시공업체 J사 대표 김모(49)씨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현장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축사 조모(41)씨 등 11명과 가짜 난연 자재를 납품받은 공장 대표 8명 등 21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재시공 등의 행정조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0경찰에 따르면 오씨와 김씨 등은 1천㎡ 이상 규모의 공장에는 내부마

감재로 난연 기능이 있는 샌드위치 패널을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6월 난연 기능이 전혀 없는 일반 스티로폼 패널을 평동산단 내 8개 공장에 납품한 뒤 해당 구청에 허위 시험성적서와 납품확인서를 제출해 정품 패널로 시공한 것으로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 및 심사도 '허점'=가짜 패널 시공이 가능한 것은 외관상 난연성 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운데다 공무원도 설계를 담당한 현장 건축사의 감리 보고서와 현장조사·검사 보고서만 보고 건축물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일반 스티로폼을 햇빛에 보름 정도 말린 뒤 패널을 붙이면 적합검사 결과 50% 가까이 정품 확인 통보를 받았다는 오씨의 진술로 미뤄 정품 검사 과정도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 필요=현재 건축법상 가짜 패널 납품업자와 이를 이용해 건

물을 지은 건축주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경찰은 적발된 가짜 패널 제조업체 대표 오씨를 건축법이 아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마저도 지난 6월5일 법이 개정되면서 공사감리자와 시공업자·설계업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

법 개정 이전에는 패널 제조·설치 금지규정은 있었지만, 처벌규정은 없었다. 특히 현재 난연성 패널 사용은 1천㎡ 이상의 공장 등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있지만, 참고는 제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지난 5월과 올해 1월에 있었던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로 창고 내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47명이 목숨을 잃었다.

김신용 광주경찰청 수사2계장은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의 주범인 가짜 패널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검찰의 관용

광주지검, 규정 위반 음식점 36곳 적발 "서민생활 안정 우선" 대부분 입건 유예

광주·전남지역 대규모 음식점 10곳 가운데 1곳 이상이 규정을 위반해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하지만, 검찰은 적발된 대부분 음식점에 대해 이례적으로 입건 유예 처리하는 '관용'을 베풀었다. 단속 실적보다는 서민 생활안정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였다.

29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과 구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먹을거리 기초질서 확립 특별단속반"은 최근 3개월간 광주의 500㎡ 이상 규모의 음식점 153곳과 광주 인근 전남 6개 시·군의 300㎡ 이상 규모의 음식점 72곳을 점검해 이 중 36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원산지 허위 표시 3곳 ▲원산지 증명서류 미보관 1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11곳 ▲영업장 면적 미신고 9곳이다.

검찰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3곳은 입건 후 벌금을 부과했지만, 나머지는 이례적으로 입건유예했다. 검찰은 또 광주 시내 대형 할인점 내 64개 식육점을 점검해 원산지 등 거래명세서 미보관 2곳을 적발, 입건유예하고 모든 적발 업소에 대해 '시정 및 재발방지 공고문'을 발송했다. 적발업소 91.6%가 사실상 형사처벌이 아닌 시정조치만 받은 셈이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이례적인 조

치로 인해 형평성 논란 지적도 일고 있다. 예로 검찰은 '멜라닌 파동'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으로 불거진 먹을거리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먹을거리 위반 사범에 대해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적발된 업소의 경우 모두 약식기소 또는 불구속 기소 대상이었지만, 계도 위주의 점검 강화 방침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2일 대검이 시달린 '서민과 함께하는 검찰권 행사'를 위한 특별 조치 시행 지시'의 취지를 적극 반영, 입건 범위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완도군 비리 내사 무혐의 종결기로

검찰이 석 달째 내사를 벌였던 완도군의 인사 및 관급 공사 비리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내사 종결 처리할 방침이다.

광주지검은 29일 "완도군 김종식 군수가 군청 인사와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비리 의혹이

있다는 대검의 첩보를 넘겨받아 그동안 관련자 계좌추적과 압수수색·통신수사 등의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왔지만, 혐의내용을 밝혀내기 어려워 결국 무혐의로 내사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첩보내용에서 거

론된 공무원들과 완도지역 2개 건설업체 등에 대해서도 "혐의 입증자료를 발견하기 어렵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다.

광주지검 한명관 차장검사는 "대검의 첩보내용이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이었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서도 혐의 입증에 어려웠다"며 "올해 말에 공식적으로 내사종결 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복회 건국훈장 반납 결의

광복회는 29일 건국과 임시정부의 법통 논쟁을 촉발시킨 문화체육관광부의 홍보용 책자 내용에 항의하는 뜻에서 건국훈장을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광복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이사진과 전국 시·도지부장, 단체장이 참석하는 연

석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결의했다.

광복회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책자 회수, 폐기에 나서거나 사과할 움직임을 없기 때문에 훈장반납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뉴라이트 단체인 '교과서로팍' 소속 교수 등이 집필

한 '건국 60년 위대한 국민-새로운 꿈'이란 제목의 관련 책자에는 "임시 정부는 자국의 영토를 확정하고 국민을 확보한 가운데 국제적 승인에 바탕을 둔 독립국가를 대표한 것은 아니었고 실효적 지배를 통해 국가를

형성한 적도 없다"며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실제 출발 기점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서술했다.

/연합뉴스

나원침 (7691) 김장동



다 좋은 건축·산업자재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사무소 : 02) 3445-0943

나주공장 : 061) 337-0571

애인 현금카드 몰래 빼내 '선심'

애인인 술에 취해 잠자는 틈을 타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훔쳐 수십 차례 돈을 인출한 40대가 경찰서행.

0경찰에 따르면 K씨는 평소 C씨가 현금카드를 찾을 때 비밀번호를 알아둔 뒤 C씨가 빈틈을 보일 때마다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한 뒤 다시 지갑에 넣는 방식으로 의심을 피해왔다는 것.

0경찰조사 결과 K씨는 인출한 돈으로 자신의 생활비에 쓰고, C씨에게 과시하듯 술과 음식 등을 사며 돈을 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미국유학의 모든 것, 메트로유학

2008년 1월 10일

미국유학의 모든 것, 메트로유학

상담 고차센터 ☎ 02) 566-2510